

# “양형 두고 공방 펼쳐야”... “양형자료 충분히 공개를”



## –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서 제기

법무뉴스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양형과 관련해 폭넓은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층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양형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철우(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주제발표에서 "양형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양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심리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신청과 공방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연방법원은 양형심리절차가 개시되면 담당판사의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원에 이미 제출된 기록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판결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한다"며 "법관은 보고서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의에 기초한 양형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손 고법판사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충실한 양형심리의 전제가 되는 양형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다보니 양형심리절차의 개선이 담보상태에 있다"면서 "양형조사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 양형심리절차를 개선해 양형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형기준 도입 후 형량이 평균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결과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양형기준 도입 전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9개 범죄의 판결문 6374건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도입 후 형량의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형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강도죄다. 2009년 7월 강도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균 형량이 21.82개월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8.57개월로 6.96개월 증가했다. 살인죄도 2009년 7월 양형기준 시행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44.13개월에서 145.38개월로 1.25개월 늘었다. 특히 살인죄의 형량 편차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비난 동기가

있는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이 대폭 증가한 결과라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강간죄도 양형기준 시행 후 평균 형량이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에서는 형량의 편차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올 1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3.7개월에서 6.91개월로 6.79개월이 줄어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오 교수는 “절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평균 형량과 각 형량의 편차가 줄어들었는데 블루칼라 범죄에 해당하는 이들 범죄의 형량이 높다거나 양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형기준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최석운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양형기준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국민의 정의관념에 부합해야 하는데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한 이유를 보면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흥분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국민 여론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흥분된 감정에 사로잡힌 국민여론이 아니라 누구나 이성적으로 자초지종을 살펴본다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의견, 즉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기초한 의견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양형기준의 수정이 흥분된 국민의 감정적 여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양형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57·2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양형위가 양형기준 시행 현황 등을 연간보고서에 담아 발간하고 있지만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내역 등

기초적 수준의 정보만 공개하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기에 미흡하다.”며 ‘실무가나 학계에서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적 제언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자료의 공개는 양형위와 양형제도 발전을 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양형자료를 법조인과 학자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확대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운 본보 편집국장은 “공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법원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언론은 법원과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국민과 양형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전국 형사 판결 가운데 양형심리 과정이나 결과가 바람직한 우수사례를 선별해 언론에 소개하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등 구성원들이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 밖에도 김현석(51·사법연수원 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태휘(47·군법 13회)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관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최이문 경찰대 교수, 이장희(44·37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성진(77·사시 2회) 양형위원장은 “앞으로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널리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의 법문화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두텁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인용)

# 법무부

##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

###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한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

#### I. 개요

1. 법무부는 지난 2017. 12. 12.(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② ‘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③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i)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ii)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iii)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 또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조사대상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는 대검찰청에 설치  
-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한다.

2.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비고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위원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 (송상교 법률사무소)
	원혜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법조인 동정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7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직원들의 박수와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대강당에 입장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며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가자.”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진성 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30년 역사는 진정 자랑스럽다.”며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고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아울러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며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2017. 11. 24.



이진성 재판소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 맞게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온다.”며 “외형보다는 내실을 더욱 추구하자.”고 강조하였다.

이 재판소장은 끝으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책무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977년 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장,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년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으며, 취임식을 마친 후에는 재판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향후 재판운영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권오곤 前국제형사재판관, ICC 당사국총회 의장 맡는다



법조인 동정

권오곤 전(前)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외교부는 ICC 이사회가 지난 6일(뉴욕 현지시간) 권 전 부소장을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ICC는 관행상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 후보자를 무투표 선출(컨센서스 방식)하는 만큼 권 전 부소장은 사실상 당선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전 부소장은 향후 당사국총회 선출을 거쳐 올해 지난 12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되었다.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 개정 등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권 전 부소장은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ICC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 국제 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 전 부소장은 국내에서 22년, ICTY에서 2001~2016년 재판관으로 재직한 형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다.

ICC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한국은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송상현 전(前) 재판소장과 정창호 재판관을 배출했다.

## 강일원 헌법재판관,

###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재선출

– 비유럽국가 유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확인



법조인 동정



〈강일원 헌법재판관〉

1.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 되었다.
2. 집행위원을 포함한 의장단 8인 중 유일한 비유럽계 위원으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 터키, 브라질 등 주요 비유럽국가 위원들과 경합하여 연임이 결정되었다. 이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베니스위원회 내에서의 강일원 재판관의 비중 있는 활동과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강일원 재판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2015년 12월 처음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여 재선출 사실을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4.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로서,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고, 유럽평의회 소속 47개국과 비유럽국가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 베니스위원회 의장단 현황

- 의장: Gianni Buquicchio(이탈리아,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 부의장: H. Kjerulf Thorgeirsdottir(아이슬란드, Bifrost 법과대학 교수), V. Bíková(체코, Charles 법과대학 교수), M. Frenco(몰타, 전 하원의장)
- 집행위원: 강일원(대한민국, 헌법재판관), C. Bazy-Malaurie(프랑스, 헌법위원회), J. M. Castella Andreu(스페인, Barcelona 대학 교수), Talia Khabrieva(러시아, 법제·비교법연구소장)